

본 수시지침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2001. 10. 10)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지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개정(수시지침)

차 례

2. 북한사회의 모습

2.1 북한 인식의 방향	1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4
2.3 북한의 정치	8
2.4 북한의 경제	15
2.5 북한의 문화	20
2.6 북한의 교육	24
2.7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28
2.8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31

2. 북한사회의 모습

2.1 북한 인식의 방향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라는 점과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며, 남북이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는 아직까지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이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은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인식에는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며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다. 탈냉전시대와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인식은 정권담당자와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의 경계대상일 수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우리 동포의

2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일부로 인식하면서 ‘포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첫째,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인식이 필요하다. 냉전시대 우리는 북한을 동족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단체 혹은 경쟁체제라고 하는 상반된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와 남북화해시대에 있어 북한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 당국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화해·협력, 공존·공영하기로 약속하였다. 아직 남북간에는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문제를 제도화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불 때 북한당국은 분명 우리의 경계대상이지만, 북한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의 사실에 너무 집착하거나 미래의 당위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 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내적 작동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게 한 ‘북한적 요소’ 또

2.1 북한인식의 방향 3

는 ‘북한적 현상’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밝혀낸 다음,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매사에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지만, 그 동안 우리는 통일 문제에서 이 상식을 동한시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 첫째,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북한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대답으로 ‘경계대상’과 ‘통일국가에서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 현실인식을 설명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 둘째,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들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왜 우리는 북한 정권담당자와 주민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1990년 이후 북한주민들은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에서 따르는 비공식적 규범체계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중국보다 잘 사는 곳'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곧 이들의 가치관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사회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쉽게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내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가치관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모해 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분단 이후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까지 북한주민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한편 주체사상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 이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 따라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이념 이외에 다른 가치관은 전혀 용납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인 경제난을 겪는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주민들도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규범과 일상생활의 비공식규범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공식규범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전히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이나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조직생활의 특성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성적 요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은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가계(家系)를 유일한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혁명적 수령관에 의하면, 주체사상에 따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사회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 수령은 ‘뇌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수령의 영도를 받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1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 단순히 육체적 존재에 머무르게 될 뿐이라고 한다.

둘째,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란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 정신은 북한의 헌법 제63조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나타나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 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한다는 현실을 ‘사회와 조직의 요구’로 받아들여 숙명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당국은 모든 주민이 ‘수령이 베푸는 은덕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해야 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킬 것을 장려하는 등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6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셋째,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는 한편 위협을 무릅쓰고 라디오를 통해 남한방송을 듣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남조선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간혹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같은 민족이 이루어낸 성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는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들어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자신들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료교육, 무료진료'는 물론이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이룬 곳이란 측면을 내세워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자부심을 표현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목표와 냉혹한 현실의 차이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부심의 표현은 북한주민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낮은 생활방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주민 중의 상당수가 당국의 공식적 가치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겉으로는 공식적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은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강요당하면서 감시와 사상무장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도 고정불변의 형태가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특성적 요소인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방식,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내용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2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7

셋째, 북한당국은 무료교육, 무료진료, 남녀평등의 실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현실과 이론에 따른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넷째,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강조한다.

2.3 북한의 정치

정치는 인간이 그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줌과 더불어 인간이 각자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를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정치는 수령과 당 및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대체로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며,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치가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자주성을 옹호하도록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정치는 당과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이에 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의 상호작용 현상 모두를 정치라고 한다.

북한 정치는 현실에서 최고권력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지도자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상과 정치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의 정치이념, 즉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

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1980년 10월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월에 수정보충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1985년 북한에서 발간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사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 전반을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은 ① 주체사상, ② 혁명이론, ③영도방법 등의 3대구성체계 즉,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은 ① 철학적 원리, ② 사회역사원리, ③지도적 원칙 등의 3대구성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은 김일성만의 혁명사상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데올로기 해석권은 김정일이 가지고 있다.

김정일의 설명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철학적 원리를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주체의 사회역사관(주체사관)이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원리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당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될 무렵인 1986년 7월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가 혁명의 주체’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의 옳은 지도를 받을 때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철학’으로 변질시켰다.

.....

10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체계화, 집대성한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으로서, 완성된 사상이론체계가 아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일관된 사상체계를 갖춘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는 북한식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이론이며 체제유지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67년 5월 당내 유일사상체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1974년 2월에 당내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됐다. 후계지명을 계기로 김정일은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장악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구호를 제시하면서 1974년 4월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만들어 공포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각된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을 정식화한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6년 7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991년 5월 '우리식 사회주의론', 1994년 11월 '사회주의 과학론' 등을 통해서 소련 및 동구의 붕괴된 사회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구호아래 수령과 당의 영도 강화를 통한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후계체제 구축에 이용됨으로써 북한정치의 파행이 초래되고, 사회발전의 동인을 잃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등소평이 표방했던 '중국특색적 사회주의'가 체제개혁과 개방을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체제고수를 위한 통치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통치이데올로기가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 사상'이다.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원리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근로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인전대(引傳帶, transmission belt)로서 군중을 교양하고 당정책 관철을 위해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근로단체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화·의식화하여 당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인전대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논리와는 달리 당, 국가, 근로단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상위에 '수령'이라는 절대권력자의 존재를 설정하고, 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유일적으로 움직이며 영도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권력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망라한 국가기구들을 일컫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기구를 사실상 지도·통제하는 최고권력기관이다. 따라서 당 우위의 국가체제인 '당-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기관은 공산당과 국가기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의 공산당은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에 창당된 이래 북한사회의 형성·발전·침체의 전 과정에 유일적 지도체로서 관여해 왔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의 핵심기구도 바로 이 조선노동당이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향도적 력량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지위에 군림하며 사상적 지도자로서, 정책의 수립 및 결정자로서, 정책집행의 감독자로서, 대중적 운동의 조직자로서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권력을 구사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2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은 1998년 9월 개정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로 말미암아, 북한은 외형상 삼권분립체제인 최고인민회의(입법기관), 국방위원회와 내각(행정부) 및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권력독점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최고주권기관이며, 유일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서 내각과 사법기관 및 인민군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하는 지도적 기구이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당과 함께 당의 영도 밑에 노동계급의 국가정권을 통하여 실현되며, 국가정권은 주권적·행정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수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정권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당의 3대 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 노선의 집행자이다.

북한의 통치체제에서 국가정권의 지위와 역할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국가정권은 입법기관(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국방위원회, 내각), 사회안전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재판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등의 권력기관들로서 이를 통하여 당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대외정책 등을 비롯한 당의 모든 정책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감독·통제한다.

북한에서는 국가정권(인민정권)이 인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戶主)’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면서, 인민정권이 호주로 되는 것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되고 사회의 모든 생활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주의제도 자체의 근본요구이며,

Vertical line of text, possibly a page number or separator.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주장한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개정헌법의 국가권력구조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부활하여 국가통치권력의 기능적 업무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군대사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실질상 국가수반, 김정일)이, 대외·외교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명목상 국가대표, 김영남)이, 그리고 대내·행정경제사업은 내각 총리(정부대표, 홍성남)가 각각 책임을 지는 업무분담 형태를 취한 것이다.

개정 헌법에서 국가 수반에 해당하는 직위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직책이지만(헌법 제102조), 실질상으로는 “나라의 정치·군사·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식상·외교상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헌법 제111조). 그리고 내각 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헌법 제120조)고 함으로써 북한의 행정부를 이끌면서 행정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북한의 국가 수반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군사우위의 위기 관리체제의 지속, 즉 ‘군사국가의 제도화’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단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 권력구조는 사상과 정치사업 전반은 조선노동당, 군사사업 및 국정전반은 국방위원회, 행정경제사업은 내각이 분담하는 통치권력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는 우당(友黨)과 근로단체들이 있다. 북한의 정당체제는 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으로 구성되는 유일당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7월 26일 선거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687명)의 정당별 비율은 조선노동당 당원이 87.5%,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 7.6%, 천도교청우당 당원

.....

14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이 3.4%, 조총련을 포함한 무소속이 1.5%이다.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의 방조자, 후비대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단체의 성격이 행정적 조직이나 문화계몽단체 또는 구락부가 아니라 대중을 혁명화하고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혁명적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조선직업총동맹(약 160만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약 130만명),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 500만명), 조선민주여성동맹(약 20만명) 등의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다원주의에 기초한 우리와 다른 북한의 정치개념과 실제 정치과정을 설명하고, 남북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둘째,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을 설명하고,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이데올로기적 위상변화를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셋째,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당-국가체제’와 ‘수령중심의 유일체제’의 논리에 따라 설명하고, 헌법에 규정된 명목상 국가대표와 실질상 국가수반의 차이를 알아본다.

1

2

3

4

5

6

7

2.4 북한의 경제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모순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자원이 고갈되고, 유기적 대외관계가 와해됨으로써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및 대외관계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를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생산과 분배를 계획에 의해 조절, 통제하는 경제운영방식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의 인적, 물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자기 완결적으로 실현하는 경제체제로 정의된다.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는 경제의 물적 토대를 중공업 개발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경공업 등 경제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불균형 개발방식이며, 혁명과 경제건설을 함께 달성할 목적으로 군수용과 민수용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군산복합체의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로 비효율성이 입증되었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을 1년 단위로 사전 계획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개인소유가 극도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인센티브 결여로 비자발적인 노동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또한 모든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책정됨으로써 상품가치와 공식 가격간에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이 인위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경제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었다.

.....

16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또한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수경제(제2경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는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민수경제의 자원 부족과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의한 지시형의 인위적인 자원배분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시켰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풍부한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만을 외부로부터 보조적으로 조달받는 자기완결(自己完結)적인 경제 건설노선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추구할 만큼 내부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산업간 유기성을 상실함으로써 기존의 내부 자원까지 고갈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 하에서의 대외무역은 스스로 생산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만을 계획적으로 수입해 들여오고, 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의 방편으로만 수출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을 통해 조달하는 식량 및 연료자원, 기술 설비능력 등과 같은 물자는 북한이 계획경제를 운영,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북한이 기술 및 산업설비를 들여오는데 지장을 초래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식량과 에너지 조달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북한은 1993년에 끝난 제3차 7개년 계획을 스스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금까지 극심한 경제난으로 경제계획 기반이 허약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차기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모순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자원이 고갈되고, 유기적 대외관계가 와해됨으로써 경제의 순환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최근 북한 경제난의 악순환 구조는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에서 출발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에너지와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경화결제를

.....

통해 직접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상품을 만들 수 없었다. 석유 등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하면서 전력의 공급이 급격히 약화되고 이로 인해 공장들의 가동률은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북한경제 전반에 원부자재 부족 현상을 초래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가속화시켰다. 식량 부족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 북한은 전체 식량 소요량의 30%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 데, 외화 부족으로 이를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된 자연재해로 자체 생산량도 5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현장으로부터 이탈, 생존차원에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더 관심을 두는가 하면, 공장들은 노동력 이탈현상,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거의 가동 중단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 공급 체계가 공적 분배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국영상점은 유명무실해졌다. 생산현장에서 이탈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공급부족으로 물가는 치솟았다. 국정가격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암시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화폐는 본래의 교환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장마당에서는 달러를 이용한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 시기에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것은 식량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있다. 특히 사상 및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8년 개정된 헌법 제37조에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북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현장을 이탈한 노

|

|

|

|

|

|

|

|

18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조달을 강화하고, 농지개간을 통해 식량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등 서방국들과의 수교도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하고, 정보기술(IT)분야의 발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발전된 중공업을 기반으로 정보기술 분야를 발전시켜 압축성장을 달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1년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도 부들과 함께 중국 상해의 첨단기술단지과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내세워도 외부경제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을 과거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장경제로 개혁하고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들도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 자료를 통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셋째,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다.

1

2

3

4

5

6

7

8

2.5 북한의 문화

북한당국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사회주의적 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혁명이라 함은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가의 임무는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북한당국은 분단 초기부터 1960년대 후반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본격화될 때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에 충실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일제치하에서 항일운동을 하며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했던 카프계열의 인사를 비롯하여, 6·25전쟁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의 이상향을 꿈꾸며 월북했거나 북한당국이 조직적으로 남북했던 인사들이 문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사실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67년 이른바 '5·25교시'를 통하여 봉건적 복고주의를 철폐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책자나 문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 이후, 건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문화계 인사들의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특히 1974년에 북한주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한 이후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내세우는 문화적 전통이 퇴조하고,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이 강력하게 등장하여 이후 북한문화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축을 이룬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은 북한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 김일성이 일제치하에서 직접 창작·공연하였다고 주장하는 혁명가극을 영화화했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영화예술론」에서 향후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종자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을 말하는데,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곧 종자론의 핵심을 이룬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김정일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1972년 이후 문학예술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를 종합하여 ‘주체의 문예이론’이라는 명칭 아래 이른바 ‘말씀 시리즈’로 발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때부터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고 강조하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문화의 혁명성을 높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예술창작에서도 속도전의 원칙을 내세워 “창작사업을 최대한 빨리 밀고 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3대혁명이란 사상·기술·문화혁명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을 의미한다. 3대혁명 이론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정식화되었다. 그 이후 조선노동당은 중앙당에 3대혁명을 조직적으로 지휘하는 부서를 두고 전국적으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따라 북한주민 누구나 참가해야 하는 대중운동으로 급격하게 떠오른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북한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당·국가·군에 속한 모든 기관과 공장은 의무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3대혁명 붉은기 판정시험에 합격하면 표창과 선물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판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상혁명 부분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2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수십 가지 노작 내용을 다 외워야 하며, 기술 혁명 부분에서는 3년 동안 국가계획을 100% 달성하고 한 두건 이상의 기술발명 실적도 올려야 하며, 문화혁명 부분에서는 조직성원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무대에 출연하여 한 시간 이상 공연이 가능해야 하고 100미터 달리기와 높이뛰기 등 국가체력검정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재질을 지닌 주민들이 중앙의 무대로 진출하는 통로 기능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관계없이 싫어도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하는 역기능적 측면도 지녔다.

한편 1980년대 중반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서도 민족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당국은 1970년대에 허무주의와 복고주의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개화기 근대문학사를 복원하고, 일제치하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불렀던 흘러간 가요를 모아 책자로 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사회주의권 이외의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세익스피어를 비롯한 서양 문학인의 작품을 다시 소개하는가 하면, 외국 의 동화책도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영화와 가요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도시처녀 시집와요”, “청춘이여!”, “휘파람” 등 사상성·혁명성의 요소가 다소 약화된 반면 일상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들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북한당국은 개방에 따른 외부문화 특히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는 ‘황색바람’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더욱 진행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점진적으로 외부문화와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이들의 문화적 취향도 달라져 북한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문화의 정치적 역할 설명을 통하여 북한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는 기본방향과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3대혁명의 문화혁명 부분이 북한주민의 일상적 문화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둘째, 북한문화의 변화과정 설명을 통하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북한문화도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북한의 민족문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혹독한 시련기를 겪다가 북한당국의 필요성에 의해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문화의 변질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셋째, 남북한의 민족문화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민족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합리적 방안에 대해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6 북한의 교육

북한당국은 건국초기부터 문맹퇴치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대중적인 교육체계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1975년 이후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누구나 배우는 나라’라는 점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이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건국 초기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교육(全民敎育)’ 시행을 위하여 의무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1949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으나 그 이듬해 6·25전쟁으로 미루었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이후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다가 1975년 9월 이후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는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실시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향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데, 북한의 ‘좋은 제도’에서는 누구나 배우고 공부하며 돈 한 푼 없어도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기간을 거치는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정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장마당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각 학교의 소년단과 청년동맹 단위로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벌여 학생들이 파철과 폐휴지, 빈병 등을 모아 학교에 제출하기도 하며, 바쁜 농사철이 되면 농촌동원을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대다수가 그들 체제의 장점을 꼽을 때 무상의무교육은 빠짐없이 거론되는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북한당국은 1999년 교육법을 채택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나 오늘날 북한교육의 기본지침을 이루는 것은 1977년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이 지침은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 교육관련사항 전반에 관한 김일성의 연설과 교시를 종합적인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내용·방법·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며,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된다. 또한 사회주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목표가 청소년을 공산주의의 충직한 혁명투사로 길러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시해 놓았다.

혁명투사의 육성이라는 북한교육의 목표는 학교현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북한의 학교교육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외국어나 예체능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당과 수령을 위한 혁명투사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교과목에 앞서 혁명역사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며, 영어를 배울 때에도 “원썩을 알려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한다”는 정신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좋은 학교로 손꼽히는 곳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학시키는 제1고등중학교가 각 지역에 있으며, 그밖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서 만경대혁명학원이나 강반석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북한의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모두 280여 곳에 이른다. 각 도에서 운영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6 제2장 북한사회의 모습

지방대학으로는 공업대학과 농업대학, 의약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등이 있고, 특수대학으로 국방대학이나 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 등이 있다. 그밖에 주요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수산사업소에는 '일하면서 배우는' 각종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있으며, 체육·예술 전문학교와 기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북한에서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잘해 내각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 무엇보다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고 각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년동맹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각 도·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아야 각 대학별로 치르는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학시험은 구술시험과 필답고사를 치르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대학입학은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의 청소년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려고 한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의 대학입학에 관심이 많으며, 뇌물을 쓰더라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대학졸업생은 조선노동당이 주관하는 '간부사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개념이 강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우대하는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졸업한 후 '공산주의 혁명투사'로서 정치적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학부 등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선호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혁명성·사상성이 약화되면서 졸업한 이후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국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국제관계대학이나 상업대학·해운대학 등에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단번 도약'의 중심고리로 정보기술교육이 강조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

.....

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전자계산기단과대학 등 컴퓨터 관련학과가 단연 인기대학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의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상성이 투철하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한 학생들이 혁명적 투쟁가로 양성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둘째, 비록 지향하는 바나 성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이후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북한의 청소년집단에서도 사상성과 혁명성 대신 실용적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북한 교육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뒤 그 속에서 자라나는 북한의 청소년집단과 우리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

|

|

|

|

|

|

|

2.7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하면 혈연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가정생활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와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의 역할을 일정한 정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부자유친(父子有親)과 부부유별(夫婦有別)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가정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혈연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가정과 “수령-당-인민”의 위계적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나누어진다고 제시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대가정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개념이며 이 논리를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하여 국가라는 2차집단을 가정이라는 1차집단에 접목시킴으로써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이 각 가정에서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각 가정마다 가장 좋은 벽면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 올리는’ 생활방식은 수령을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발현이라고 하겠다.

또한 북한당국은 복고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가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 차림을 자녀에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저해되는 발언을 한 부모를 고발할 것을 장려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이 이런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혹 부모를 고발하는 자녀도 있었으나 분명히 그런 행동이 가족과 친척,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다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수령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을 경우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일꾼으로 자라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배치받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자를 찾아다니면서 집에서 기르던 돼지나 개 등으로 뇌물을 바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나 총각을 자녀의 배우자로 고르기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주변에 널리 부탁하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띈다고 한다.

한편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아내는 남편을 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의견이 다르거나 아버지께 간청할 일이 있다면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 어머니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내는 배급이 줄어들어 쌀알을 구하기 어려워도 남편의 밥그릇에 흰쌀밥을 올리고, 어렵게 구한 계란을 그 밥 속에 묻어두려고 최선을 다한다. 여성들의 희생적인 태도는 노동신문에서도 “우리 녀인들은 한 공기의 죽도 양보하고 나물밥도 남편과 아들들의 밥쪽에 담으면서 아무 내색도 없이 빈 밥쪽을 감추어 가며” 일터에 나가는 모습을 찬양할 정도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가정에서는 딸보다 아들이 훨씬 우대를 받는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딸보다 아들이 태어날 때 더 좋아하며,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또한 남녀평등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북한여성들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한편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특히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주민들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므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예전에 지주들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일제시대 때부터 불러왔던 옛 노래를 배우고 기독교와 불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북한의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당국이 금지하는 내용까지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역시 중대한 변화의 고비를 맞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욱 심리적·정서적으로 밀착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살길을 찾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할 때 혈연을 기초로 한 가정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가정생활도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셋째, 북한주민의 가정생활에 나타나는 전통적 규범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규범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8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조직생활을 의미한다. 북한의 성인중에서 조선노동당 당원들은 직장마다 구성되어 있는 당조직을 통하여 사상교육을 받고 학습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진행한다. 입당하지 못한 성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나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당의 외곽단체에 가입해서 당조직의 지도에 따라 사상학습을 받고 조직생활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 사이에 체제부정 의식을 발생시키고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이완시키고 있다.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한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유치원 높은반에 들어갈 때부터 누구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조직생활을 하면서 집단주의 가치관과 유일사상지배체계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인정하는 기본조직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소년단 단원이 되는 절차를 입단이라 한다. 입단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입단 준비는 해당 연령의 아동들이 똑같이 시작하여 1년 안에 빠짐없이 입단을 하게 되지만,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학교 입학 이후 2학년까지 생활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출신성분이 좋은 아동들이 먼저 추천을 받아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을 하면 그 아동들을 위한 입단식이 거행된다.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을 위해 입단식을 할 때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아동들은 소년단 깃발 앞에 서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손으로 베껴 쓴 입단맹세문을 읽은 뒤 어른들이 달아주는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받는 등 행사가 엄숙하게 거행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어린이들은 자신도 사회의 기본조직에 들어간 만큼 공부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도 잘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인민학교의 한 학급에서 아동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간부는 분단위원장과 조직담당부위원장, 사상담당부위원장 등이 있다. 학생 간부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팔에 빨간색 줄과 별 모양을 달아서 간부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이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파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 과외활동을 할 때 기본단위가 된다.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학급 소년단위원을 통해 각 학급별로 한 학기당 수행해야 할 과업의 종류와 분량을 지시한다. 또 토요일을 소년단의 날로 정해 놓고 분열행진 연습을 하거나 학급별 생활총화도 진행한다. 소년단 생활은 인민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고등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누구나 다 붉은 넥타이를 풀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한다. 청년동맹은 과거의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에 해당하는 조직인데, 1996년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소년단 입단과정과 비슷하지만 초급단체인 각 학교의 심의를 거쳐 각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청년동맹 가입이 까다로운 것은 북한사회에서 이 조직을 조선노동당의 후비대(後備隊)로 인정하여 그만큼 중시하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점을 교육받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싸서 휴대한다고 한다.

청년동맹의 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고등중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이후 만 30세까지라고 한다.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4학년이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각자의 직장에 소속한 청년동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또한 만 18세 이후에는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하여 당조직으로 옮겨가는 젊은이도 나오고,

.....

.....

.....

.....

.....

여성의 경우 청년동맹 맹원으로 활동하다가 결혼한 이후 직장에 다니지 않고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가입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나 만 30세 이후에도 입당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옮겨가야 한다.

약 3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당원들은 각 직장별로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수행의 최소단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 직장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직장세포에 소속하게 배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당 세포를 만든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거나 정년퇴직에 해당하는 연로보장을 받아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동네 인민반을 통해서 당의 지도에 따라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기술학습 등 쉴새없이 각종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이나 외곽단체의 소속원이 생활총화에 빠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직생활을 기피한 사람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평정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 그 사람의 조부모 때부터의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았다가 대학입학이나 군 입대, 직장배치 등 일생동안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난 속에서 식량배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직생활도 많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북한당국도 주민의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구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반적인 조직생활도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 사이에 체제 부정 의식을 발생시키고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이완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체제 이완 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개인송배시스템의 동요이다. 북한체제는 절대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유일체제이다. 이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문화적 기초는 대중의 수령에 대한 '충성', '효성'과 수령의 대중에 대한 '사랑', '믿음'의 상호교환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송배시스템은 수령이 대중에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보장할 때에 제대로 작동한다. 만약 '전능하다'는 수령이 이를 보장하지 못하면 대중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개인송배시스템의 동요조짐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조금씩 정치적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으며, 각 가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경배의식도 약화되고 형식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첫째,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남보다 먼저 소년단과 청년동맹에 가입할 것을 원하며, 성인들은 당원이 될 것을 희망하는 심리적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외곽단체의 조직생활을 설명하고, 그 조직생활이 이완되고 있는 현상과 이유를 밝혀준다.

셋째,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사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향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전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
•

•
•
•

•
•
•

•
•
•

•
•
•